전국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지연 실태 -전국 단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조적 행정 관행 규명 및 제도 개선안

2025. 12. 04.

[영유아교사협회 **/ aboutdi@naver.com]**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개요 및 방법

제**2**장**.** 지급 지연의 전국적 보편성 분석

1. 지연 발생의 전국적 분포 현황
2. 지역을 초월한 지연 시기의 동일성
3. 행정 처리 방식의 표준화된 문제점

제**3**장**.** 구조적 원인 진단**:** 왜 전국적인가**?**

1. 법적 보호의 형평성 상실
2. 예산 추계의 실패와 구조적 과소 편성
3. '선지급 시스템' 부재에 따른 행정 경직성

제**4**장**.** 교사가 입는 경제적 피해 규모 **(**전국 추산**)**

1. 유동성 제약에 따른 가계 위기
2. 실질 금융 손실
3. 자산 형성 기회의 구조적 박탈

제**5**장**.** 직무 만족도 및 보육의 질적 영향

1. 직업적 자존감 하락과 상대적 박탈감
2. 경제적 불안에 따른 업무 몰입도 저하
3. 경력 교사 이탈과 보육 인프라 약화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2. 제도적 개선 방안
   가. '선지급-후정산' 원칙의 전국 의무화
   나. 지급일 법제화 및 지연 이자 보상 도입
   다.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감사 및 관리 감독 강화

[붙임**]** 주요 피해 사례 및 설문 통계 요약

요 약

1. 연구 배경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되는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수당이 매년 연말 전국적으로 지연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것이 특정 지역의 일시적 재정난이 아닌, 국가 보육 행정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결함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주요 분석 결과

- 전국적 현상**:** 총 **530**건의 지원금 지연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 충청(대전, 세종 포함), 전라(광주 포함), 경상(부산, 대구 포함), 제주 등 전국 모든 권역에서 지연 현상이 나타나는 '전국적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피해가 집중되어 경기도**(240**건**),** 인천광역시**(66**건**),** 서울특별시**(55**건**)** 순으로 높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수도권 3개 지역에서만 전체 피해 사례의 약 68.1%(361건)가 발생하여 예산 부족이 아닌 지급 시기를 결정하는 **'**행정 의지**'**의 문제임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 경제적 손실의 전국화**:** 교사 1인당 평균 약 **12**만 원의 순수 금전적 손실(이자, 연체료 등)을 입고 있으며, 이를 전국 보육교사 규모로 환산할 경우 약 **275**억 원의 비용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 자산 형성 붕괴 심화**:** 지원금 지연을 경험한 응답자의 ****75.6%****가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대출, 지인 차용 등의 대체 자금을 사용(빚을 짐)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34.8%****가 지연으로 인해 예금 및 적금 납입을 중단하거나 해지하는 등 미래 자산 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핵심 제언

국가 책임 보육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다음의 조치가 시급하다.

1. 전국 공통 가이드라인 수립**:** 예산 부족 시 지자체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시스템을 전국 의무 사항으로 규정.
2. 지급일 법적 강제**:** 행정 편의에 따라 변하는 지급일을 **'**매월 **25**일**'**로 법제화하고 위반 시 지연 이자 지급.
3. 총체적 점검**:**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전국 지자체의 연말 보육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특별 감사 실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막대한 보육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양육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는 명절이나 휴일이 겹치지 않는 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입금된다. 이는 해당 수당들이 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지자체의 최우선 집행 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동일한 보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및 각종 처우개선비는 매년 연말만 되면 "예산이 소진되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중단 빈도가 높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수혜 대상에 따라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차별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한다. 이에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지급 지연의 보편성과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이것이 교사 개인의 경제권 침해를 넘어 국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 개요 및 방법

- 조사 기간**:** 2025년 11월 ~ 12월
- 조사 대상**:** 전국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등) 근무 보육교직원
- 유효 표본**:** 약 500명 이상 (전국 17개 시도 분포)
- 조사 내용**:**
    - 근무환경개선비 지연 경험의 빈도 및 지속성
    - 지역별 지연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 추산
    -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자, 연체료, 자산 손실 등) 규모
    - 직무 만족도 및 제도 개선 요구 사항
- 분석 방법

  : 수집된 데이터를 권역별로 분류하여 빈도 분석 및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피해 금액은 응답 구간값의 평균을 적용하여 전국 규모로 추산하였다.

제**2**장**.** 지급 지연의 전국적 보편성 분석

1. 지연 발생의 전국적 분포 현황

설문 데이터 분석 결과, 지급 지연은 특정 지자체의 일탈이 아닌 전국적 현상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 지자체조차 지급을 지연한다는 것은, 이것이 '예산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소극행정임을 보여준다.

설문 데이터 분석 결과, 지급 지연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탈이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조차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재정적 어려움'의 문제가 아닌 '재정 지출에 소극적인 행정 의지'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표 **1]** 권역별 지급 지연 피해 응답 분포

순위	권역	비율 **(%)**	발생 지역 **(**시**/**군**/**구**)**
1	경기도	45.3%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 남양주시, 덕양구,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수원시 ,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용인시 ,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천안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화성시 , 회성시
2	인천광역시	12.5%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인천서구, 중구
3	충청권 (남/북/대전/세종)	10.9%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동구, 서구, 서산시, 세종시, 아산시, 예산군, 유성구, 음성군, 제천시, 천안시, 천안시 , 청주시, 청주시 , 충주시
4	서울특별시	10.4%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5	강원/기타	8.5%	강릉시, 광산구, 광주, 구미시, 남구, 남원시, 북구, 서귀포시, 양산시, 원주시, 의성군, 전주시, 제주시, 창원시, 창원시 , 춘천시

6	부산광역시	7.4%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시, 부산진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진구, 해운대구
7	대구광역시	5.1%	달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서구, 수성구
계	전국 합계	100.0%	전국 17개 시도 전체 분포

데이터*:* 설문 응답자 거주지 분석

2. 지역을 초월한 지연 시기의 동일성

전국적으로 지연 발생 시기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대다수 지역에서 **11**월분 수당부터 지급이 중단되며, 익년 1월에 소급 지급하는 **'관행적 이월'**이 전국 표준 매뉴얼처럼 고착화되어 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거의 매년 겪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인재로 판단된다.

[표 **2]** 지급 중단 및 지연 지속 기간 분석

지연 유형	지속 기간	비율 (%)	시사점
단기 지연	1~2개월	69.3%	11월·12월분 체불 (가장 보편적 형태, 약 70%)
중기 지연	2~3개월	23.9%	해를 넘겨 1월 말~2월 지급 (상당한 비중)
장기 지연	3개월 이상	6.8%	9월~10월부터 지급 중단 (심각한 생계 위협)

3. 행정 처리 방식의 표준화된 문제점

지연 발생 시 행정 당국의 대응 방식 또한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1. 사전 고지 불이행**:** 공문 등을 통한 공식적인 사전 안내 없이, 지급일이 임박해서야 원장을 통해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 민원 억제 관행**:** "예산이 없으니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다", "담당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식의 민원 제기 억제 압박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다수 보고되었다.

제**3**장**.** 구조적 원인 진단**:** 왜 전국적인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면, 왜 전국의 보육교사들은 매년 연말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본 장에서는 그 구조적 원인을 진단한다.

1. 법적 보호의 형평성 상실 **(**아동수당 **vs** 교사수당**)**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수당임에도 법적 위상에서 큰 차이가 난다.

- 아동수당**/**부모급여**:**「아동수당법 시행령」 등에 의해 지급일(매월 25일)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 즉각 예비비가 투입된다.
- 보육교사 수당**:**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사업안내)에 근거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 의무가 유예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 예산 추계의 실패와 구조적 과소 편성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소 예산 편성의 관행화이다.

- 매년 보육교사 호봉 상승, 신규 교사 유입,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발생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이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 "부족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메우겠다"는 안일한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 추경 확보에 실패하거나 시기가 늦어지면서 연말 지급 불능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3. '선지급 시스템' 부재에 따른 행정 경직성

국비나 도비의 교부가 늦어질 경우, 일선 시·군·구(기초지자체)는 자금 집행을 멈추는 경직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

- 문제점**:** 교사의 임금은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최우선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상부로부터 자금(또는 예산)이 아직 지급(또는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
- 현실**:** 우선 지급할 수 있는 행정적 여력이 있음에도,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4장. 교사가 입는 경제적 피해 규모

보육교사의 급여는 타 전문직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20~30만 원, 많게는 50만 원에 달하는 수당의 지급 지연은 전국 교사들의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1. 유동성 제약에 따른 가계 위기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교사 1인당 평균적인 유동성 제약(체불 원금) 규모를 산출하였다.

- **1**인당 평균 지연액**:** 약 **600,000**원 (월 30만원 × 2개월 기준)
- 전국적 파급 효과**:** 전체 보육교사(약 23만 명) 중 80%가 피해를 입는다고 가정할 때, 매년 연말 약 **1,104**억 원의 인건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셈이다.

2. 실질 금융 손실 및 전국 피해 총액

단순히 돈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넘어, 교사의 주머니에서 실제로 사라지는 비용(매몰 비용)은 행정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한 손해이다. 설문 데이터 분석 결과, **1**인당 평균 손실액은 약 **1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보육교사 경제적 피해 규모 전국 추산

구 분	산출 근거	추산 금액
1인당 평균 손실액	이자, 연체료, 적금 해지 손실 등 가중 평균	약 **119,450**원
전국 교사 수	2024년 보육통계 기준	약 **230,000**명
📉 전국 총 피해액	1인당 손실액 × 전체 교사 수	약 **274**억 **7,000**만 원

분석**:** 매년 연말,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전국의 보육교사들이 약 **27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부당하게 떠안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교사들에게 강제로 징수한 '지연세'나 다름없다.

3. 자산 형성 기회의 구조적 박탈

가장 심각한 양적 피해는 자산 형성 기회의 박탈과 가계 부채의 증가다. 설문 분석 결과, 교사들은 자신의 월급을 받기 위해 빚을 내고 적금을 깨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표 **4]** 자산 손실 및 부채 발생 통계

구분	주요 피해 항목	응답 비율	시사점
부채 증가	대출, 지인 차용,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	75.6%	국가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개인 빚으로 전가
자산 붕괴	적금·예금 납입 중단 및 중도 해지	34.8%	미래 종잣돈 상실청년 교사: 미래 종잣돈 상실

[표 **5]** 피해유형

피해 유형	구체적 손실 내용	현장의 목소리 **(**사례**)**
주거 안정성 위협	주택청약 해지	"여행 후 카드값을 메워야 하는데 수당이 안 나와서, **10**년 동안 부어온 청약 저축을 깼습니다**."** (인천 서구 교사)

생애 주기 자금 소실	결혼·출산 자금 잠식	"결혼 자금으로 모으던 적금을 연말 생활비 때문에해지했습니다.”
악성 부채 발생	생계형 카드론·현금 서비스	"월급이 밀려 카드 대금을 막기 위해 단기 카드론을 이용했습니다. 신용점수 하락은 물론, 이자까지 제 돈으로 물어야 했습니다."
금융 비용 전가	마이너스 통장 의존	"지급이 늦어지는 동안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자는 고스란히 제 몫입니다."

제**5**장**.** 직무 만족도 및 보육의 질적 영향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 수단이자, 자신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는 척도이다. 전국적으로 만연한 지급 지연 사태는 교사의 직무 태도와 심리 상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직업적 자존감 하락과 상대적 박탈감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이 국가 책임 보육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공공부문 종사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한다.

- 사회적 수치심**:** 생활비 부족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은 교사로서의 사회적 위신과 개인적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 직업적 회의감**:**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가 보육교사에게만 적용된다는 인식은 "국가가 우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박탈감으로 이어진다.

2. 경제적 불안에 따른 업무 몰입도 저하

경제적 안정은 업무 몰입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지급 지연은 이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 주의 분산**:** "카드값 걱정으로 잠이 줄었다", "업무 중에도 계속 통장 잔고를 확인한다"는 응답은 교사의 주의력이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안전사고 위험**:** 영유아 보육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교사의 심리적 불안정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질을 떨어뜨리고, 잠재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3. 경력 교사 이탈과 보육 인프라 약화

반복되는 지급 지연과 이에 대한 행정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교사들의 이직 의도를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 고용 불안감**:** "월급이 밀리는 직장이라니, 계속 다녀야 하나 싶다"는 반응은 고용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 인력 유출**:** 숙련된 경력 교사의 이탈은 보육 현장의 노하우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영유아와 학부모가 누려야 할 보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귀결된다. 즉, 행정의 실패가 국가 보육 인프라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지연 사태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적 재난**:** 특정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행정 실패이다.
2. 천문학적 피해**:** 교사 개인이 떠안는 금융 손실만 연간 **275**억 원에 달하며, 이는 보육 현장의 경제적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3. 미래의 상실**:** 35% 이상의 교사가 적금을 깨고, 62% 이상이 빚을 지는 현실은 보육교직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2. 제도적 개선 방안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일한 만큼 제 날짜에 받는 상식의 회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가**.** **'**선지급**-**후정산**'** 원칙의 전국 의무화

현재 국비 교부가 늦어지면 지자체 집행도 멈추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 제안**:**지침 개정을 통해, 인건비성 예산 부족 시 지자체 예비비 등을 활용한 선지급을 의무화하고, 추후 국비 교부 시 정산하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나**.** 지급일 법제화 및 지연 이자 보상 도입

"예산 범위 내 지급"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 제안**:**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일을 교사 급여일인 매월 **25**일로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
- 보상**:** 지급기일을 넘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준하여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 지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다**.**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감사 및 관리 감독 강화

- 제안**:** 매년 연말 반복적으로 예산 부족 사태를 빚는 지자체(경기, 인천, 대구 등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차원의 합동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산 추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의적인 과소 편성이 적발될 경우 다음 연도 예산 배정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맺음말

보육교사는 국가의 미래인 영유아를 돌보는 최일선 전문가입니다. 이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적시에 지급하는 것은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예산 부족"이라는 구태의연한 변명으로 전국 23만 보육교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붙임**]** 주요 피해 사례 및 설문 통계 요약

1. 주요 피해 호소 사례 **(**전국 분포**)**

[경기 파주시 / 1년차]

"고작 200만 원 남짓한 월급에서 30만 원은 생존이 걸린 돈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월급도 예산 부족하면 밀립니까? 보육교사를 봉사직으로 아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듭니다."

[인천 서구 / 4년차]

"매년 연말마다 예산 부족이라며 2~3개월치가 밀립니다. 이번엔 여행 후 카드값을 메워야 하는데 수당이 안 나와서 10년 동안 부어온 적금을 깼습니다. 제 인생 계획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대구 남구 / 7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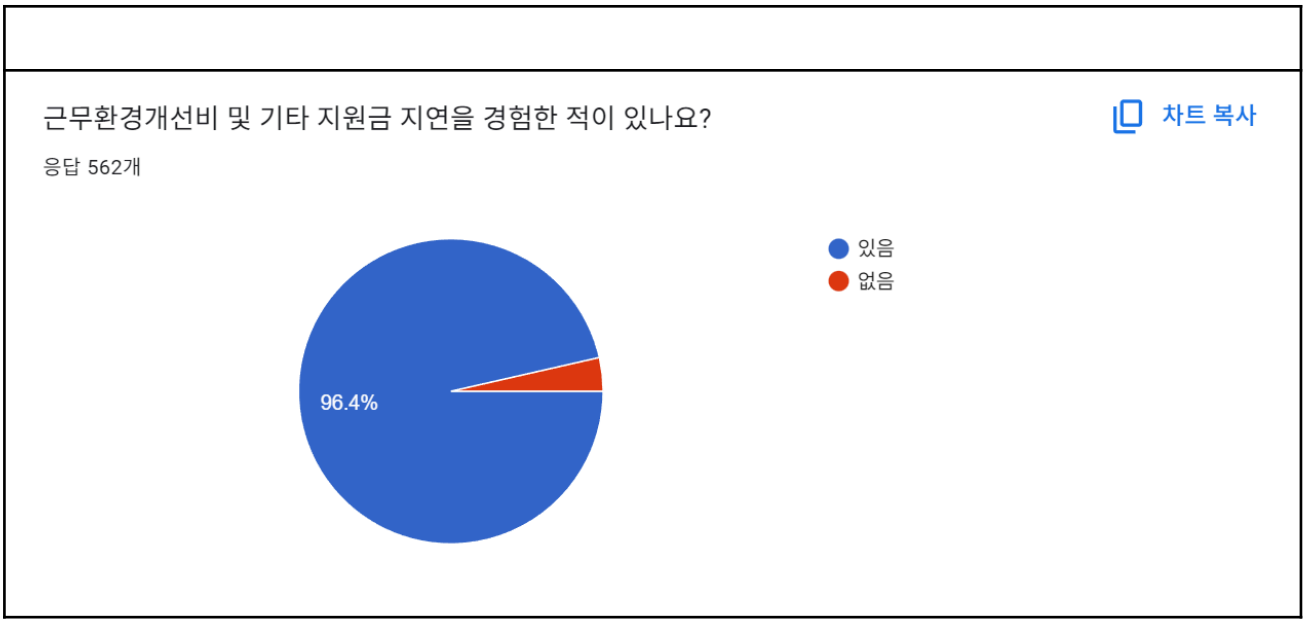
"대출금을 못 갚아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빌리고, 이제는 카드론까지 사용해 막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바닥을 칩니다. 지자체장이 바뀔 때만 잠깐 신경 쓰고, 선거 끝나면 보육교사는 항상 후순위입니다."

[부산 연제구 / 3년차]

"지급 지연된다는 문자를 원장님 통해서 당일에야 받습니다. 미리 알려주기라도 하면 대비라도 할 텐데,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 설문 통계 핵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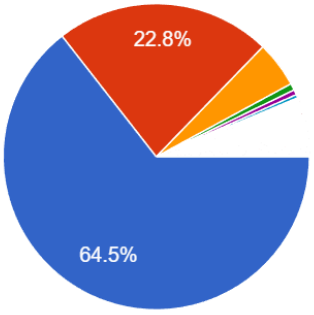
구분	주요 결과	시사점
지연 발생 빈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매년 겪음"	일시적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
지연 지속 기간	평균 **2**개월 (최장 **4~5**개월)	단기 유동성 위기 심각
경제적 피해	1인당 순수 손실 약 **12**만 원	공적 비용의 사적 전가
행정 만족도	90% 이상이 "사전 안내 미흡"	행정 소통 부재
개선 요구 **1**위	지급일 법제화 및 선지급	제도적 안전장치 요구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매년 통상 몇 개월의 지연이 있었나요?

차트 복사

응답 55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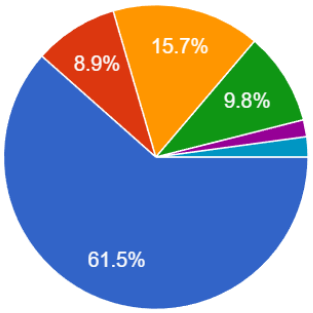
- 1-2개월
- 2-3개월
- 3-4개월
- 4-5개월
- 없음
- 3개월
- 호봉 쳐주면 안주고 호봉 안쳐주면 준다며…
- 매월 17일 지급에서 갑자기 올해부터 매…

▲ 1/6 ▼

최근 5년 기준으로 지연 빈도는 얼마나 되나요

차트 복사

응답 5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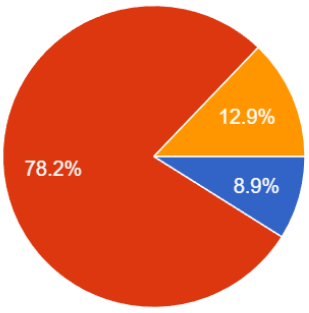


- 거의 매년 늦게 지급되었다.
- 2년에 한 번 정도 늦게 지급되었다.
- 한두 번 정도 있었다
- 올해 처음 겪었다
- 잘 모르겠다
- 기타

지연 사유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 있나요?

차트 복사

응답 56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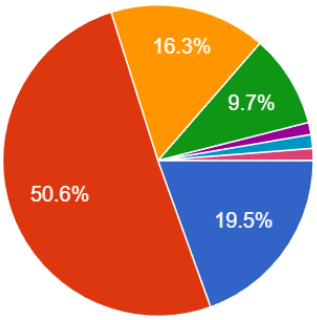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들었다
- 간단히만 들었다
- 안내받지 못했다

지원금(처우개선비 등)이 늦게 들어올 때, 선생님께서 느끼는 심리적·정서적 영향은 어떤 것이었나요?

차트 복사

응답 5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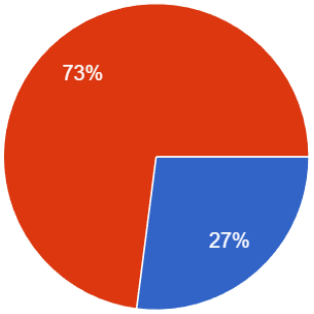


-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없어 불안했다
- 카드값·공과금 등 돈 걱정으로 잠이 줄었다
- 일상생활 중 자꾸 신경이 쓰였다
- 직장에서 동료들과 불만·스트레스 이야기가 많아졌다
- 부모님·배우자 등 가족과 대화할 때 짜증·걱정이 늘었다
-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 기타

민원을 넣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달 받은 적이 있나요?

차트 복사

응답 56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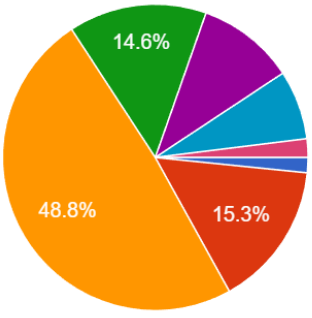


- 네 들었습니다.
- 아니오 듣지 못했습니다.

지연을 경험했던 근무환경개선비 및 기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차트 복사

응답 56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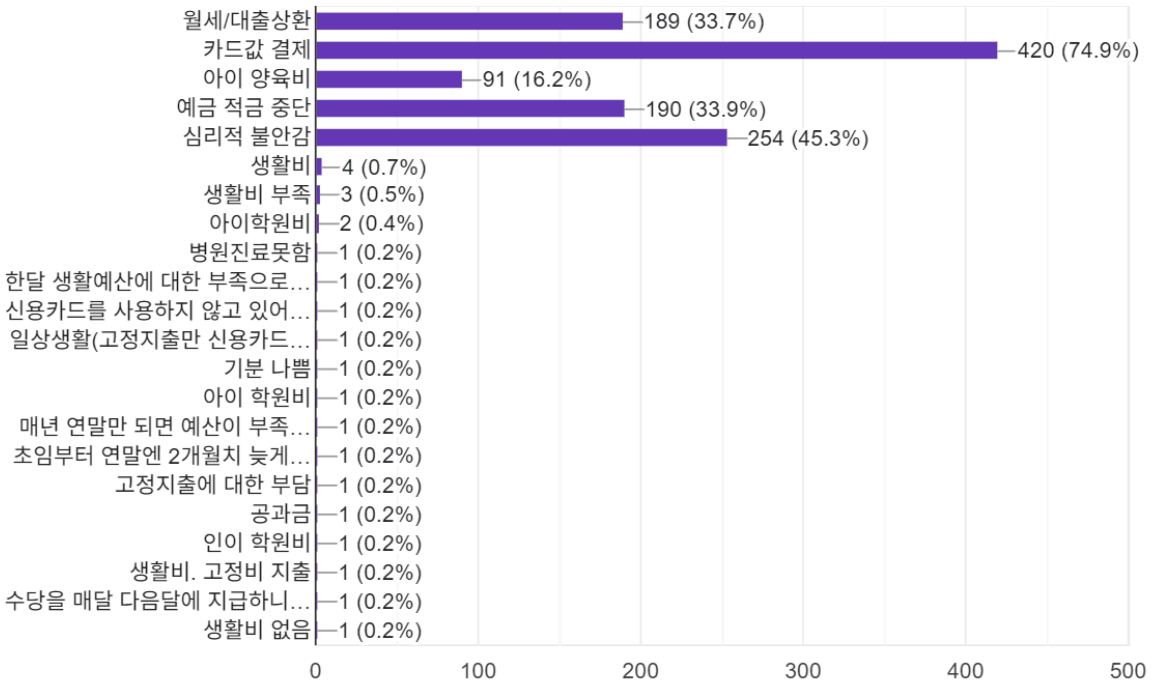


- 10만원 미만
- 10~20만원 미만
- 20~30만 원 미만
- 30~40만 원 미만
- 40~5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
- 잘 모르겠다

지연 시 가장 곤란했던 지출 항목(중복 가능)

차트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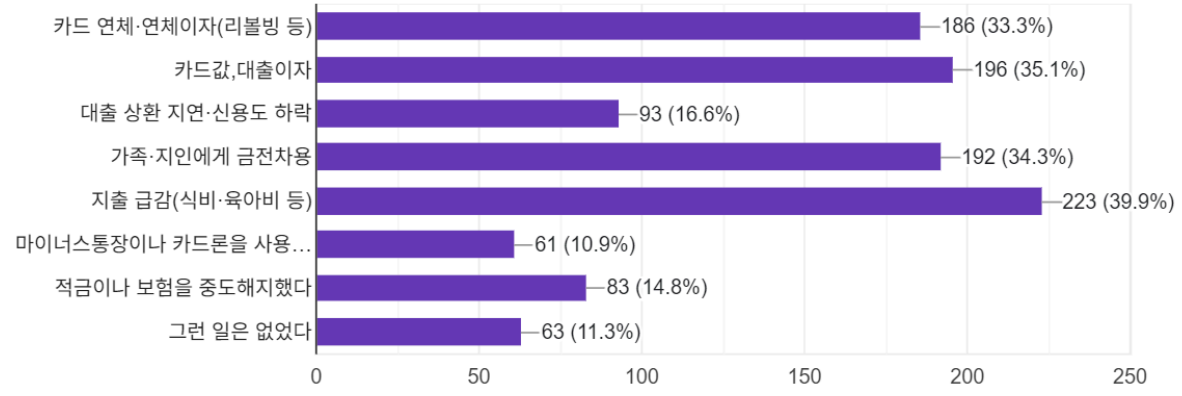
응답 561개



실제로 발생한 피해(중복 가능)

차트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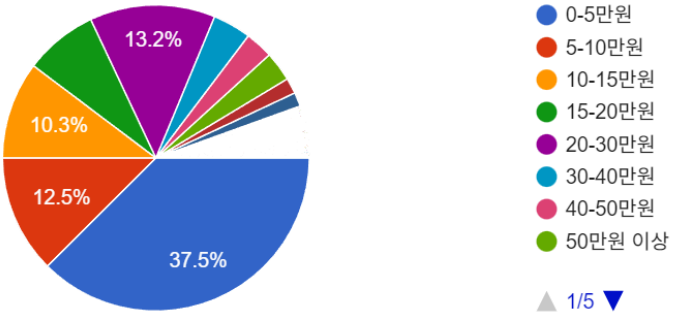
응답 559개



근무환경개선비 및 기타 지원금 지연 지급으로 실제로 금전적 손실(연체료·이자 등)이 있었나요?

차트 복사

응답 544개



근무환경개선비 및 기타 지원금 지연 지급으로 대체 자금 사용액(대출/지인차용 등)

차트 복사

응답 553개

